

2023년 양회를 통해 본 시진핑 집권 3기 경제운영 전망과 시사점

문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morganmoon@kiep.go.kr, Tel: 044-414-1189)

허재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jcheo@kiep.go.kr, Tel: 044-414-1042)

박민숙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Tel: 044-414-1511)

오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ojh@kiep.go.kr, Tel: 044-414-1286)

김영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oungsun@kiep.go.kr, Tel: 044-414-1272)

차 례

1. 양회(两会) 개요
2. 경제운영 방향
3. 10대 중점 업무
4. 정부조직 및 인사 개편
5.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2023년은 시진핑 정부 3기가 정식 출범하는 해이자 14차 5개년 계획을 실행하는 세 번째 해로서, 이번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경제정책 운영방침과 함께 시진핑 3기를 이끌어갈 정부조직 및 인사를 발표함.
 - 미중 갈등의 심화와 글로벌 경제 블록화로 확대되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안정적 성장', '발전과 안보의 균형', '내수 증진'에 중점을 두어 거시경제를 운영할 방침임.
 - 중국은 과학기술부 개편,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신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통해 중장기 발전 전략의 핵심 경제발전 분야에 대한 당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함.
- ▶ 중국정부는 '안정 최우선, 안정 속 성장'의 거시정책 기조를 기반으로 '5% 내외'의 보수적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발표함.
 - '5%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최근 5년(2018~22년)간 중국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달성한 평균 경제성장률(5.2%)을 기반으로 시진핑 3기의 안정적인 경제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제시된 수치로 해석됨.
 - 중국정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계획으로, 재정적자율과 중앙예산 내 투자 등 재정 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확대하였으며, 실물경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별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임.
 - 이번 양회에서는 '발전과 안보의 균형'을 강조한 점이 특징인데, 이는 중국정부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자립, 공급망 안정, 신형거국체제 구축(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평가됨.
- ▶ 한국은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변화와 시진핑 3기 조직·인사 개편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국익에 기반한 한·중 경제관계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진핑 3기 정부가 2023년 거시경제 기조를 '경제안정'과 '안정 속 성장'에 중점을 둔 것은 높아지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내수경기에 중점을 두어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중국의 대내외적 전략 변화에 따라 한국의 대중 협력관계 개선이 필요함.
 - 이번 양회에서 중국정부가 당면한 경제분야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지향적' 조직개편을 감행하면서 과학 기술, 금융, 디지털(데이터) 등 중국 경제발전 핵심 영역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당-국가체제' 속에서 중국 경제정책의 강도와 깊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중국은 국내경제 내실화와 더불어 무역·외국인투자·해외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무역체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로 확대되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응하여 한국은 국익을 고려한 원칙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양회(两会) 개요

■ 2023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에서 중국정부는 2022년 경제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2023년 거시경제 목표, 경제운영 방향, 중점 업무 등을 확정함.

- 양회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¹⁾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²⁾를 통칭하는 것으로, 정협은 3월 4~11일, 전인대는 3월 5~13일에 개최됨.
- 이번 양회는 시진핑 3기 공식 출범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정책을 결정할 고위급 인사들이 결정되는 자리였음.
 - 전인대에서는 국무원 리창 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원 부총리, 국무원 위원, 각 부처 부장(장관),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협 주석 등 기관별 수뇌부들이 결정됨.
- 전인대에서는 「정부업무보고(국무원)」,³⁾ 「2023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⁴⁾ 「2023년 정부예산안 보고(재정부)」⁵⁾를 심의·비준함.
 - 「정부업무보고」는 중국의 2022년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2023년 거시경제 운영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2023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는 경제운영의 10대 중점 업무를, 「2023년 정부예산안 보고」는 2023년 중국정부의 재정예산 계획과 주요 방향을 제시함.

■ 「정부업무보고」에 드러난 2023년 경제운영 정책 방향은 ‘안정적 성장’, ‘발전과 안보의 균형’, ‘내수 증진’의 키워드로 요약됨.

- 임기 마지막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한 리커창 총리는 “2022년은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국내경제 안정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실행해야 하는 한 해였으며, 20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로드맵을 확정하는 한 해였다”고 평가함.
 - 2022년은 미중 갈등 장기화로 중국의 대외환경 리스크가 확대되고, 상반기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지속적이고 산발적인 확산으로 인해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중국 경제성장률(3.0%)이 목표치(5.5% 내외)를 하회하였음.
 - 이는 2000년 이후 중국이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첫 번째 기록임.⁶⁾
- 2023년 중국정부는 높아지는 국내외 경제 리스크를 고려하여 경제안정에 초점을 두고, 내수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경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 중국정부는 경제안정에 중점을 두어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한 대외 리스크의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경기 둔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2023년은 ‘14차 5개년 계획(이하 ‘14.5규획’)'의 세 번째 해로서, 중국정부는 14.5규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쌍순환 전략, 기술 자립, 신흥산업 육성, 대외개방 확대 등의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1) 정협은 중국 최고 국정 자문기구로, 국정 방침에 대한 제안 및 비판의 기능을 수행함.

2)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집행 기구로 △헌법 개정 △법률 제정 △고위 관료 임명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 수립 △정부예산안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함.

3) 「政府工作报告(2023)」.

4) 「关于2022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执行情况与2023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草案的报告」.

5) 「关于2022年中央和地方预算执行情况与2023年中央和地方预算草案的报告」.

6) 2020년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였을 당시 중국정부는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음.

- 2022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내수경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성장 안정 △고용 안정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경기를 운영할 계획임을 발표함.

■ 2023년 양회에서는 중국의 입법 규범화 법안인 「입법법(立法法)」이 개정됨.

- 「입법법」은 중국의 ‘법률의 법률’로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총 37개 조항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짐.⁷⁾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국공산당 지도사상 정립 △헌법 권위와 합헌심사 강화 △입법 결정 및 수립 메커니즘 개선 △지역 법규 및 협력 시스템 구축이 있음.⁸⁾
-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국공산당 지도사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추가하고, ‘법치 궤도 위에서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보장’할 것을 명시함.
- 개정안에서는 헌법의 권위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이번 전인대 이후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신규로 제정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감찰법」, 「감사법」 등 20개 법안에서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이라는 문구를 추가함.
- 또한 개혁개방에 필요한 경우 전인대 외 상무위원회에서 ‘특정문제’에 대해 일정 ‘기한 및 범위’ 내에서 일부 조항을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입법 수립 메커니즘의 유연성을 확대함.

2. 경제운영 방향

가. 주요 거시경제 목표

■ [경제안정] 2023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제시

-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2035년 중장기 경제성장 목표를 실현하고 2023년 경제 회복과 안정적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5.5% 내외)보다 0.5%p 낮은 보수적인 경제성장률 목표(5% 내외)를 제시함.

■ [고용안정] 도시지역 신규고용 목표 ‘1,200만 명’ 이상, 도시 조사실업률 ‘5.5% 내외’로 제시

- 2023년 대학 졸업 예정자 수는 2022년보다 88만 명 많은 1,158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노동력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고용환경 안정을 위해 신규고용 목표를 상향 조정함.
- 2022년의 경기둔화로 침체되어 있는 국내 경제와 민생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도시 조사실업률 목표를 2022년 목표와 동일하게 제시함.

7) 중국의 「입법법」은 2000년 3월에 통과된 법안으로, 2015년 3월에 처음으로 개정되었음.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2023. 3. 14), 『中国人大网』, <http://www.npc.gov.cn/npc/kgfb/202303/eb5e0e60ff5f43f7a3bfa2a10bbe6ba.shtml>(검색일: 2023. 3. 15).

8) 「解读立法法修正草案: 为中国式现代化提供有力法治保障」(2023. 3. 7), 『中国网』, http://news.china.com.cn/2023-03/07/content_85148953.htm(검색일: 2023. 3. 15).

■ [물가안정] CPI 상승률은 '3% 내외'로 제시

- 글로벌 인플레이션 급등에도 2022년 중국의 CPI 상승률은 2%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은 외부 유입성 인플레이션 등의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CPI 상승률을 3% 내외로 설정함.

■ [소득 안정] 주민소득은 '경제성장률과 동일한 증가율을 유지'할 것을 제시

- 재분배 제도 개선, 중산층 확대, 저소득층 소득 증대 등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소비 기초가 되고 내수확대의 기반이 되는 국민소득 증가율을 경제성장률과 동일하게 유지할 것을 제시함.

■ [국제수지 균형] 수출입의 안정적 성장 및 수준 제고를 도모하고 국제수지 균형 유지

-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자와 대외무역을 안정화하고, 중국의 산업·공급망 우위 확보, 대외무역 안정화 정책 추진,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등을 통하여 대외무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식량안보] 식량 생산량 6.5억 톤⁹⁾ 이상 유지를 목표로 제시

- 글로벌 식량수급 시장 변화와 국내 생산·소비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장 공급량과 가격 안정을 통한 식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량 생산량을 2022년과 동일한 수준(6.5억 톤 이상)으로 제시함.

■ [생태환경 발전] GDP 단위 에너지 사용량을 2% 감축하고, 화석에너지 소비를 감축하여 생태환경을 질적으로 개선

- 2022년에는 과도한 에너지 감축으로 인한 경기둔화를 고려하여 정성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던 반면, 2023년에는 14.5규획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에너지 사용 감축비율을 제시함.
- 특히 화석연료 소비량을 줄이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표 1. 2020~22년간 정부업무보고의 거시정책지표 비교

구분	지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거시경제	GDP 성장률	-	6.0% 이상	5.5% 내외	5.0% 내외
	주민 소득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성장	안정적 성장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성장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성장
	소비자물가상승률	3.5%	3.0%	3.0%	3.0%
	도시 신규 고용	900만 명 이상	1,100만 명 이상	1,100만 명	1,200만 명
	도시 조사실업률	6.0%	5.5%	5.5% 내외	5.5% 내외
	거시 레버리지 비율	-	기본 안정	기본 안정	기본 안정
통화재정정책	통화정책	적당히 합리적(合理适度)	유연정확(灵活精准), 적당히 합리적(合理适度)	유연적절함(灵活适度) 합리적·충분한 유동성(流动性合理充裕)	정확하고 힘있게(精准有力) 합리적·충분한 유동성(流动性合理充裕)
	재정적자 비율	3.6%	3.2%	2.8%	3.0%
	재정 지출	재정적자 규모 3.76조 위안, 방역채권 1조 위안 발행	재정적자 규모 3.57조 위안	재정적자 규모 3.37조 위안	재정적자 규모 3.8조 위안

9) 1조 3,000억 원.

구분	지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방정부 특별 채권	3조 7,500억 위안	3조 6,500억 위안	3조 6,500억 위안	3조 8,000억 위안
	감세 혜택	부가가치세율 지속 하향조정, 신규 감세 및 수수료 규모 5,000억 위안	제도적 감세정책 지속 실행, 소액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 기한 연장	제도적 감세정책 지속 실행, 기업 부가가치 공제세액 환급	제도적 감세정책 지속 실행
정부 투자	중앙예산 투자 규모	5,776억 위안	6,000억 위안	6,100억 위안	6,800억 위안
	중점 프로젝트	철도 투자 8,000억 위안, 도로, 수운(水運) 투자 1.8조 위안 등	‘양신일중(两新一重)’ ¹⁰⁾ 프로젝트	‘양신일중(两新一重)’ 프로젝트	14.5규획 중점 프로젝트, 과학기술과 전정특신 중소기업
기업 지원	대형 상업은행의 영세기업 대출 증가율	30% 이상	40% 이상	30% 이상	미제시

자료: 「정부업무보고」(2020~2023).

나. 거시경제정책 기초

■ [거시경제정책 기초] 2023년 중국정부는 전년도의 ‘안정 최우선, 안정 속 성장(稳字当头, 稳中求进)’의 거시정책 기초를 유지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발전과 안보’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명시함.

- 대내외적으로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환경 속에서, 중국정부는 2023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조화로우음을 강조함.
- 중국의 리오프닝을 실현하고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시장 참여 주체인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질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며, 산업정책은 ‘발전과 안보’의 균형을 추구할 방침임.
- 이와 동시에 2022년 하반기부터 심화되었던 글로벌 경제 리스크의 유입, 중국의 부동산 시장 위축,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청년 취업 문제 등의 경제하방 리스크들을 해결해야 함.

■ [확장적 재정정책] 2023년 중국의 재정정책 기초는 ‘힘을 더하고 효율성을 제고한다(加力提效)’로, 2022년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초를 유지하지만 재정지원의 정밀도를 높일 방침임.

- 2023년 중국정부가 제시한 재정적자율 목표는 3%로 코로나19 대응 초기인 2020~21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2년 대비 0.2%p 상향 조정됨.
 - 2023년 재정적자율 목표가 전년대비 0.2%p 높아짐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5,100억 위안 늘어난 3조 8,800억 위안임.
 -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신규 발행규모도 2022년 대비 1,500억 위안 상향 조정된 3조 8,000억 위안임.¹¹⁾

10) 양신일중(两新一重)은 2020년 5월 22일 리커창 총리가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두 개의 新(신형 인프라 건설, 신형 도시화 건설)과 한 개의 重(교통, 수자원 사용 등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의미함.

11) 다만 2022년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신규 발행규모는 연초 예산 편성된 3조 6,500억 위안에서 5,000억 위안이 추가 발행되어, 총 4조 1,500억 위안이 집행되었음. 「2023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

- 2023년 재정정책은 △재정자원 효율성 제고 △소비 촉진 △정부 주도 투자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계획이며, 재정지출 예산 규모는 27조 5,100억 위안으로 2022년 대비 약 8,000억 위안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 재정개혁 심화를 추진하고, △재정자원 배분 최적화 △재정정책 효과 증진 △자금 사용 효율성 확대를 통하여 재정지출의 정밀도를 높이며 중점 발전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내수시장 회복을 위해 사회소비를 촉진할 방침으로,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의 재정이전 등의 정책을 활용하여 주민소득을 증진할 방침임.
 - 14.5규획 중점 프로젝트,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 신형 인프라 투자를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사회투자를 촉진할 계획으로, 중앙예산 내 투자금으로 전년 대비 400억 위안 상향 조정된 6,800억 위안을 책정함.

표 2. 중국의 재정지출 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

구분	2022년		2023년	비고
	목표	실적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2.8%	2.8%	3.0%	· 0.2%p 상향 조정
재정적자 규모 (조 위안)	3.37조 위안 (중앙 2.65, 지방 0.72)	3.37조 위안 (중앙 2.65, 지방 0.72)	3.88조 위안 (중앙 3.16, 지방 0.72)	· 2022년 대비 5,100억 위안가량 증가
지방정부 특수채권 발행	3.65조 위안	4.15조 위안	3.8조 위안	· 2022년 목표 대비 1,500억 위안 증가
감세 및 비용경감 등	2조 5,000억 위안	약 4조 2,000억 위안 ¹²⁾	일정 수준의 감세 및 비용절감 지속	· 감세정책 수혜 대상 선정의 정밀도를 높여 기업의 실수요를 만족시키고, 제조업, 중소·영세 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일반 공공예산 지출	26.71조 위안	26.06조 위안	27.51조 위안	· 재정자원 배분 최적화, 재정정책 효과 증진, 자금사용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재정지출 구조 최적화
중앙예산 내 투자	6,400억 위안	수치 미제시	6,800억 위안	· 400억 위안 증가 · 14.5규획 중점 산업과 중요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자료: 「정부업무보고(2023)」, 「2023년 정부예산안 보고」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안정적 통화정책] 실물경제에 필요한 유동성을 ‘정확하고 힘있게(精准有力)’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3년 통화정책 기조는 기존의 ‘유연하고 적절한(灵活适度)’ 유동성 공급에서, 필요한 분야에 ‘정확하고 힘있게’ 유동성 공급 방침으로 변환됨.
- 이를 위하여 M2 통화 공급과 사회용자 규모의 증가 속도를 명목 GDP 증가 속도에 맞추어 조절하고, 과학기술과 전정특신(专精特新) 중소기업 등 필요 분야에 대한 신규대출을 확대할 계획임.
 - 2022년 중국정부는 △기준금리 0.5%p 인하(4월 0.25%p ↓, 12월 0.25%p ↓)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 0.15%p 인하 △5년물 대출우대금리 0.35%p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였음.
 - 하지만 지속되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로 중국정부의 금리인하 여력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중국정부는 재대출, 재할인, 특정 분야 신용대출 등의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실물경제 유동성 지원을 추진할 방침임.

12) 이 중 부가가치 공제세액 환급은 2조 4,000억 위안, 신규 감세 및 비용경감은 1조 위안 이상, 세금 및 비용 연체 7,500억 위안.

표 3. 통화정책의 2022년 실적 및 2023년 목표

구분	2022년		2023년
	목표	실적	
M2	· 통화 공급량은 기본적으로 명목 GDP 증가 속도에 맞추어 조절 ·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시 레버리지율의 기본적인 안정 지속 · 신규 대출 확대	전년대비 11.8% 증가	· 통화 공급량과 사회용자 총액은 기본적으로 명목 GDP 증가 속도에 맞추어 조절 ·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실물경제 수요를 만족시키며, 금융 리스크를 방지
사회용자 총액		전년대비 9.6% 증가	
중소·영세 기업 자금조달 지원	· 영세기업 대상의 신규 포용적 대출 확대 · 대형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인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운영비용 인하	2022년 말 기준 영세기업 대상 포용적 대출 및 제조업 중장기 대출 잔액은 전년대비 각각 23.8%, 36.7% 증가	· 과학기술,专精特新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 확대 · 기업의 종합용자 비용과 개인 소비 대출 비용 안정적으로 감축 · 특정 분야에 대한 재대출을 활용한 통화정책 지원 확대
환율	·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	2022년 12월 기준 6.9646위안/달러	· 환율 시장화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

자료: 「정부업무보고(2023)」와 「인민은행 2022년 4/4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10대 중점 업무

■ 2023년 중국정부는 △방역 시스템 구축 △내수확대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과 산업·공급망 안정화 △개혁 심화 △농업·농촌 우선 발전 및 농촌 진흥 △지역 균형 발전과 신형도시화 건설 △대외개방 △녹색 저탄소 발전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민생 개선의 10대 임무를 제시함(부표 참고).¹³⁾

■ [① 방역 시스템 구축] 새로운 코로나19 방역관리 체계를 구축¹⁴⁾하고, 의료물자 재배치와 의료환경 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임.

- [2급 감염병의 2급 관리(乙类乙管)¹⁵⁾] 코로나19의 상시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조기에보 시스템 강화, 코로나 19 모니터링 및 정보 보고체계 구축, 노인층의 백신 접종률 제고, 농촌의 방역역량 제고를 추진함.
 - 코로나19 동향 분석을 통해 정확한 예보와 필요한 방역조치 시행,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등) 대상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 제고 등 예방과 치료 추진
 - 공공위생 방역 제고 및 방역 관련 인프라 건설을 통해 중증 치료자원을 보완하고, 부족한 농촌의 방역역량 제고
- [의료물자의 공급 보장] 주요 의료물자의 생산과 공급을 보장하고, 의약품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품질 보장, 공급 확보 등 의료물자의 배치를 최적화함.

13) 본고는 「정부업무보고(2023)」의 10대 임무를 구체화한 「2023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10대 중점 업무를 참고하여 정리함.

14) 기존의 엄격한 정부집중 방역체계에서 보다 완화된 방역체계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의 방역관리 책임이 4차 책임제로 변경됨. 4차 책임제(四方责任)란 '소속지(属地, 지역 당 위원회와 정부), 부문(部门, 관련 부서), 업체(单位,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 개인(个人)'이 코로나19 관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뜻하며, 향후 이를 통해 전 사회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공동 예방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15) 중국정부는 2023년 1월 8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의 등급을 하향(갑급(1급)→을급(2급)) 조정함.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 예방통제 조치 대상에서 해제하고, 감염관리 대상 감염병(격리조치, 밀접접촉자 식별, 고위험 지역 및 저위험 지역 분류 등)에도 포함하지 않음.

- 의약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대형체인 약국과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고, 가격 및 시장질서 단속을 통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
- 의약품 공급사슬(생산, 저장, 운송, 사용)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
- [의료환경 개선] 도시와 농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의료·보건 기반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
- 바이러스 번식지에 대한 상시화된 위생 관리를 통해 감염병 전파를 효과적으로 예방, 의료 관련 인프라 개선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건강한 사회건설 추진] 상시화된 등급별 의료분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의료센터 건설을 추진함.
- 의료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 전국적으로 지역별 국립의료센터의 건설을 추진하는 등 공립 의료기구를 주체로 한 의료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 **[② 내수확대]** 중국은 소비확대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으며, 그 밖에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 신형 인프라간의 연동성 강화를 추진함.

- [소비 잠재력 방출] 소비 회복 및 확대를 위해 소비능력 강화·소비조건 개선·소비방식(场景)¹⁶⁾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조치를 실시할 예정임.
 - 소비능력 강화를 위해 중저소득층 대상 소비 지원정책 실시, 유급휴가 제도 도입, 물가 안정 추진, 공급구조 개선, 소비 촉진행사를 개최
 - 소비조건 개선과 소비방식 혁신을 위해 지역 소비거점 조성, 전기차 소비 장려를 위한 인프라 확충, 친환경 제품 구매 지원 장려, 서비스 소비 회복조치 추진, 다양한 형태의 소비 모델 발전 추진
- [유효투자 확대] 14.5규획의 102개 주요 프로젝트 건설을 지속하며, 민간투자 활성화 조치를 마련할 예정임.
 - 2023년 중앙정부 예산 6,800억 위안을 투입하며, 향후 국가 중점 발전전략 및 식량·에너지·공급망 안보와 국가안전, 민생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
 - 민간자본의 국가 주요 프로젝트 건설 참여를 장려하고, 각종 규정 개정을 통해 투자구조 개선 추진
- [주요 인프라 건설 추진] △교통 △수리 △물류 △신형 인프라(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데이터센터 등) △항공우주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며, 특히 신형 인프라간의 연동성을 강화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동수서산(东数西算)’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가 데이터 처리 허브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함.¹⁷⁾

■ **[③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과 산업·공급망 안정화]** 기술 경쟁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전통 및 신흥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며, 디지털경제 발전과 산업·공급망 안정화 조치를 추진함.

- [과학기술 자립자강 강화] 신형거국체제(新型举国体制)¹⁸⁾하에서 핵심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기술 경쟁에

16) 소비자 니즈(needs)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콘텍스트 쇼핑 기술임.

17) ‘동부(东)지역의 데이터(数据)를 서부(西)지역에서 처리(算)한다’는 의미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략임.

18) ‘신형거국체제(新型举国体制)’는 정부와 시장의 역량을 결합하고 국가전략 과학기술력과 사회 자원을 결집하여 중대 과학기술 난제를 해결하는 조직 모델 및 운영 메커니즘을 의미함. 이는 정부·시장·사회의 유기적 결합을 도모하고 기업의 혁신 지위 강화, 정부의 과학기술 관리 직능 전환 가속화,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것임. 『健全新型举国体制(思想纵横)』(2022. 12. 8), 『人民日报』.

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함.

- 과학기술 기초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혁신센터 설립, 독자적인 혁신 제품 및 오픈소스 기술 응용 추진,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육성, 우수기업의 커창판(科创板) 상장 촉진 등
- [산업구조 고도화] 전통산업 및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신에너지 및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통산업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제조업의 첨단화·스마트화·녹색화 발전 추진 △첨단 기술의 R&D와 응용 확대 △품질 강국 건설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함.
- 산업 중점 영역에서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노력 지속, 철강 등 핵심 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석유화학 산업 배치 최적화, 신에너지 자동차·5G·태양광 등 비교우위 산업의 선도적 지위 유지, 바이오 경제·베이더우(北斗) 위성 관련 산업·수소 에너지 산업 발전 추진
- [디지털경제 발전 가속화] △데이터 관련 기본제도 확립 △스마트 농업 발전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소비 모델 지원 △플랫폼 기업 지원 △디지털경제 거버넌스 협력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계획임.
- 데이터 재산권 제도와 데이터 거래시장 관련 제도 확립, 오픈소스 시스템(开源体系) 구축
- 디지털 상거래를 통한 농업 진흥 추진, 라이브 커머스·즉시 배송 전자상거래(即时电商) 발전 지원
- [산업 및 공급망 안정 촉진]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 제고 △자원 탐사 및 개발 역량 강화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유통 보장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함.
- 산업·공급망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조치 실시, 산업사슬의 취약한 부분 보강, 전체 산업망 고도화 촉진

■ [④ 개혁 심화] 중점 분야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 [시장에 활력 부여] 법률·법규 개정을 통해 기업의 재산권 및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발전 지원 및 강소기업 육성을 강조함.
- 공정한 경쟁과 발전 가능한 환경 조성에 주력하며, 민영기업의 발전을 도모함.
- [높은 수준의 시장체제 구축] 전국 통일 대시장(统一大市场)¹⁹⁾ 건설을 추진하고, 재산권 보호·시장 접근·공정한 경쟁·사회신용 등 시장체제 기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함.
- 선전(深圳)에 중국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구를 건설하기 위해 시장진입 완화와 관련된 특별 조치를 실시하고, 조달 및 입찰 과정 디지털화 등 각종 개혁을 추진함.
- [비즈니스 환경 개선] 비즈니스 환경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합리적 관행을 축소하고자 함.
-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시하고, 시장 진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며, 자격 취득, 입찰, 정부조달, 권익보호 등에서 차별적 대우 개선, 행정권력 남용 배제 추진
-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합법적 권익 보호 강화, 통관 개혁 등을 추진하며, 첨단 제조업 및 기술 산업에서 외자기업 유치를 확대
- 기업 대상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온라인화를 통한 행정 간소화를 추진
- [중점 영역 개혁 추진] 재정, 조세, 예산, 금융, 에너지 가격, 운송, 전력, 산업 등 중점 영역 전반에서 나타난 시스템 문제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9) 상품 및 생산요소에 대해 지역간 제한 없는 자유로운 이동을 구현하여 최적화와 효율화된 시장을 의미.

■ **[⑤ 농업·농촌 우선 발전 및 농촌 진흥]**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탈빈곤 성과를 공고히 하며, 산업간 융합발전을 통해 농촌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식량안보 기반 강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보장기제 구축과 농업의 핵심기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식량의 유효한 공급을 확보할 계획임.
 - 식량 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정책²⁰⁾을 시행하는 한편 주요 생산지와 판매지에 대한 지원정책 개선
 - 농업의 핵심기술 역량 강화, 시설농업 발전 및 식품 공급 다원화 메커니즘 구축
- [탈빈곤 성과 공고화] 탈빈곤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빈곤층 이주 및 안정적인 정착과 취업·소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탈빈곤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산업진흥을 추진하고, 탈빈곤 노동자에게 지속적으로 취업기회 제공²¹⁾
 -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맞춤형 농촌지원(万企兴万村²²⁾)책을 통해 빈곤지역에 다양한 후속조치 시행
- [산업간 융합발전 추진] 도농 융합발전 촉진, 농촌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시설 건설, 농민소득 증대 등을 통해 산업간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 농촌 특색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업 현대화, 농민소득 증가 등 추진
 - 도농 통합을 통한 취업, 교육, 의료, 양로 등의 정책 시스템 구축, 농촌지역 내 공공인프라 건설·운영·유지보수 추진
- [농촌 현대화 추진] 농촌의 인프라²³⁾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속, 전력망 확대 공사 및 안정적인 급수보장 등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농촌 인프라 정비를 통한 생활여건 개선, 농촌 전력망 확대공사 추진 및 안정적인 급수 보장, 농촌 물류의 핵심 네트워크 구축

■ **[⑥ 지역 균형 발전과 신형도시화 건설]** 기존 지역 발전전략을 토대로 신형도시화 건설을 가속화하고, 주요 지역 중점 과제의 지속 추진을 통해 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형성할 계획임.

- [지역 균형발전 전략 추진] 서부·동북·중부·동부 지역별 발전전략과 더불어 각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발전정책을 시행하여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유도함.
 - 중부지역에 첨단제조업 중심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 내륙지역에 개방형 경제실험구 건설
 - 국가급 신구의 역할 강화, 변경지역·생태퇴화지역·자원의존형 지역 등 특정 지역의 발전 추진
- [주요 지역 발전전략 심화]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 숭안신구(雄安新区) 건설,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

20) 중국정부는 곡물생산계획(千亿斤粮食产能提升行动)을 통해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계획임. 중국의 곡물 생산량은 지난 8년 연속 1조 3,000 억 근 이상으로 안정되었으며, 2022년 기준 곡물 생산량이 1조 3,731억 근에 달함.

21) 빈곤을 탈피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3,000만 명 규모의 일자리 제공(以工代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노동자 임금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22) '만 개의 기업이 만 개의 마을을 돕는다'는 기존의 '만기방만촌(万企帮万村)'운동이 2021년부터 '만기흥만촌(万企兴万村)'운동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 '만기방만촌'운동은 중국 전역 1만여 개 이상의 민영기업이 결연사업을 통해 3년~5년 내 빈곤 촌 1만 개 이상을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정책임. '만기방만촌'운동이 '만기흥만촌'운동으로 전환되면서 민영기업은 농촌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농촌진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즉 민영기업은 농촌 투자를 통해 농촌의 융합발전을 유도하고 선진기술과 현대적인 생산요소를 도입하여 신산업 및 신업태 육성에 노력하고 있음. 百度百科.

23) 농촌에 3급 및 이상 도로 건설 추진, 노후 도로 개조, 좁은 도로 확대 건설 추진, '사호농촌로(四好农村路, 건설·관리·유지보수·운영 상태가 양호한 농촌 도로)' 건설 등.

발전전략,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 등 기존 지역별 발전전략의 추진을 가속화하고자 함.

- 창장경제벨트의 생태환경 시스템과 오염 단속 ‘4+1공정’ 추진, 14.5 통합 발전계획 실시, 상하이 5대 센터²⁴⁾ 건설 가속화
- [주체기능구 전략 제도 및 시스템 개선] 효율적인 공간계획을 통해 전 국토를 관리하고, 상호보완이 가능한 국토발전 구조를 형성함.
 - 국토공간 계획강요를 제정하고 주체기능구(主体功能区)²⁵⁾ 제도를 완비하여, 전국 국토를 ‘삼구삼선(三区三线)’²⁶⁾하에 엄격히 관리
- [사람 중심 신형도시화 건설 수준 제고] 농업 전이인구²⁷⁾의 시민화를 촉진하기 위해 취업·기능 교육·사회보험 등 도시 공공서비스의 보장 강화, 도시권의 건설 가속화 등을 통해 도농간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 농업 전이인구의 도시정착을 지원, 청위지역 쌍성경제권(成渝地区双城经济圈)²⁸⁾ 건설 추진, 스마트 도시 건설, 도농 융합발전 메커니즘과 정책 시스템 완비

■ [⑦ 대외개방] 무역·외국인투자·해외투자를 중심으로 한 대외개방 확대기조를 견지하면서 ‘일대일로’를 활용한 국제협력력을 더욱 확대하고, 특히 다자무역체제 및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함.

- [무역강국 건설 추진 가속화] △수출의 안정적인 발전 △가공무역의 수출 부가가치 제고 △무역의 혁신 발전 △자유무역시험구 고도화 전략 시행 △서비스무역 확대 △디지털 무역 발전 등을 추진함.
 - 국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구 건설, 자유무역시험구 및 전국판 국경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공포
- [외자 이용 및 해외투자 확대] 외자 유치 및 이용 확대기조를 유지하면서 외국인투자자의 권익 보호와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시행하는 한편, 전방위적인 외채관리 강화, 해외투자 관리의 디지털화 수준 제고, 해외 광물자원 개발협력 촉진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함.
- [‘일대일로’ 고품질 발전 추진] ‘일대일로’ 출범 10주년을 기념하여 관련 계획을 추진하면서 협력국가와의 실무 협력 확대, 보건·녹색·디지털·혁신 실크로드 건설 심화, 역외 프로젝트의 리스크 예방·통제 전면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워 ‘일대일로’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협력 선행구 건설, ‘실크로드 해운(丝路海运)’²⁹⁾ 등 ‘일대일로’ 관련 브랜드 영향력 지속 확대
 -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개최

24) ‘5개 센터’는 국제경제센터, 금융센터, 무역센터, 해운센터, 기술혁신센터(国际经济、金融、贸易、航运和科技创新)임.

25) 2011년 중국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지역개발 전략임. ‘주체기능구’ 중 ‘주체(主體)’는 한 지역이 부담할 수 있는 주요한 혹은 우선적인 기능을 뜻하며, 그 ‘기능’에는 경제발전, 환경보호, 기타 기능이 포함됨. 다시 말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1개 혹은 1개 이상의 중점적인 발전기능을 부여하고, 그 기능이 최대한 활성화되기 위한 국토 개발정책을 집행함.

26) 도시는 도시개발 경계선, 농촌은 영구기본 농전(永久基本农田,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 보호, 생태공간은 생태보호를 위한 레드라인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의미함.

27) ‘농업인구의 전이’는 농업 내에서 농업인구의 직종 전환 또는 농업 이외의 기타 부문(업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함.

28) 청위지역에서 청은 청두, 위는 충칭을 가리키며, 청위 지역이란 중국 쓰촨성의 청두시부터 충칭시까지의 지역을 의미함. 중국정부는 2020년 1월 ‘청위지역 쌍성경제권’ 건설을 논의한 후 청위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29) ‘실크로드 해운(丝路海运)’은 중국 최초의 해상 운송 관련 ‘일대일로’ 국제 종합 물류 서비스 플랫폼으로, 2023년 현재 실크로드 해운 항로는 총 94개이며 중국, 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의 31개국·지역의 108개 항구를 연결하고 있음.

-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적극 참여] 다자간 무역체제를 강조하고 WTO 개혁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며 더 많은 국가 및 지역과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자 함.
-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³⁰⁾를 적극 추진하고 UN, G20, APEC, BRICS,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SCO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 강화

■ **[⑩ 녹색 저탄소 발전]** 생태계 보호 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오염 방지, 녹색 저탄소 발전,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추진하고자 함.

- [녹색 저탄소 산업 발전] 에너지 다소모·고오염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고, 녹색산업 지도목록에 대한 개정작업을 실시하며, 환경보호 기술 및 상품 연구 개발을 장려함.
- 녹색제조³¹⁾를 확대하고 공업, 건설, 교통 등 영역에서의 녹색전환을 추진하며, 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체계 구축, 녹색소비 등을 강조
- [환경오염 방지] 대기오염 방지 캠페인을 지속하고, 오염물 배출 제한과 더불어 하수처리 관리 정비 등 수질 종합 관리를 추진하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고체 폐기물,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에 대한 관리를 추진할 계획임.
- [생태계 관리 강화] 자연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향상하기 위해 대규모 자연 생태계 보호 및 체계적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국립공원을 ‘국가생태안전보호체계’에 포함하며, 생태계 보호 보상 조례(生态保护补偿条例) 등을 실시하고자 함.
- [탄소중립 추진] 중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 총량 및 효율지표 조정 △석탄 사용 효율화 기술 연구 △대형 풍력·태양광 설치 프로젝트 추진 및 에너지 저장(ESS) 사업 추진 △탄소배출권 통제 및 거래시장 제도 개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상 적극 참여 등을 추진하고자 함.

■ **[⑨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각종 경제·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고 에너지 안보 및 공공안전 관리 수준 향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정 유지를 추구함.

- [경제·금융 리스크 통제 강화]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부실자산 관리 강화,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완화 등을 비롯하여 국제 경제·금융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면밀히 추적·분석함으로써 경제·금융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계획임.
- 신시민(新市民)³²⁾ 청년 등의 주택문제 해결, 보장성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에너지 자원 안보 보장] △에너지 생산·공급·비축·판매 시스템 구축 △에너지 안전 생산 책임제 완비 △전력 생산·공급 역량 향상 △전략 자원 개발·탐사 역량 제고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보장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함.
- 석탄화력발전 등 신뢰성 있는 전력원 건설 확대, 수력발전 개발과 생태보호의 전면 계획 수립,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강화
- 철광석·칼륨·리튬 등 자원개발 프로젝트 지원, 석유자원 탐사·개발 역량 확대

30)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全球发展倡议, GDI)’는 시진핑 주석이 2021년 9월 제76차 UN 총회에서 처음 발표한 것으로,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이행 진전 △개도국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함.

31) 설계, 제조, 포장, 운송 등 생산 전 주기에서 보다 효율화된 제조방식을 의미함.

32) ‘신시민(新市民)’은 직장 또는 학교 등의 사유로 도시에 유입된 여러 집단을 총칭함.

- [공공안전 관리수준 제고 국민 생명·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대사고의 발생 예방 및 억제 △국가 비상대응 역량 강화 △식품 및 의약품, 핵심 공산품, 특수 설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 △사회 치안의 종합적인 관리 강화 △평안중국(平安中国)³³⁾ 건설 추진 등에 주력할 계획임.

■ [⑩ 민생 개선] △고용 및 소득 증대 △교육수준 향상 △사회보장 범위 확대 △생활 필수품 가격 안정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 민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취업 확대] 대학 졸업생, 농민공, 퇴역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형태의 취업을 장려하는 한편, 취업 및 직업 훈련제도를 완비함.
 - 평생직업 기능훈련 제도 완비, 취업 공공서비스 체계 완비
 - 고용 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제한과 차별 해소
- [주민소득 증대 촉진] △합리적인 임금인상 시스템 완비 △중간소득계층 지속 확대 △소득분배 질서와 부(富) 축적 메커니즘 규범화 △자산사업의 3차 분배 역할 발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함.
 - 저장성의 고품질 발전과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을 지원하는 '1+N' 정책 시스템 완비
 - 중저소득층의 요소소득 증대, 주민 재산소득 증대, 농민 소득 증대 촉진, 농민공의 임금 지급 보장
- [교육 시스템 수준 향상] △교육 강국 추진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 △지역의 교육 자원 배치 최적화 △직업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의 시너지와 혁신 추구 △사립교육의 발전 규범화 등을 통해 교육수준을 제고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함.
- [사회보장체계 완비] 각종 보험제도를 정비하고 사회보장체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함.
 - 기본양로보험의 전국 통합제도 완비, 기본의료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의 성(省)급 통합 관리 추진, 중대질병 보험과 의료지원 제도 완비
 - 농민공·프리랜서·새로운 취업 형태의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가입 메커니즘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체계 정비
- [민생 필수 품목의 공급·가격 안정] 주요 식료품, 농산물, 에너지원 등 핵심 품목의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유지하고, 이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임.
 - 곡물·기름·고기·계란·채소 등 민생 필수 품목의 공급과 가격 안정 추진, 농산물, 석탄 등 핵심 품목의 원가 조사를 통해 공급과 가격 안정 유지
 - 교외 대형창고 기지를 배치하여 도시에 생활물자 비상 공급역량 제고
 - 가격 관리감독 강화, 매점매석·가격선동 등 위법 행위 엄중 단속
- [공공 서비스 체계 완비] △농촌 공공 서비스 체계 구축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 촉진 △인구 고령화 대응전략 추진 △출산 지원 조치 이행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 완비 등과 관련된 목표를 제시함.

33) '평안중국(平安中国)'은 2021년 3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강요(초안)」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평안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사회발전 목표임.

4. 정부조직 및 인사 개편

가. 정부조직 개편

■ 국무원의 이번 조직개편은 14.5규획과 20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14.5규획과 20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두 번째 백년의 목표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과 ‘안전(안보)’이라는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³⁴⁾
- [발전] 고품질(高质量) 발전과 신발전구도(新发展格局)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과학기술부 재조직 △금융부문 대폭 개편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개선 △국가 데이터국 신설 △농업농촌부 직책 최적화 등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고품질 발전과 향촌 진흥 등을 도모할 방침임.
- [안전(안보)]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 내부안보와 외부안보, 국토안보와 국민안보, 오프라인 안보와 온라인 안보 등 안보의 영역과 내용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금융부문 대폭 개편을 통한 금융안보 대비 △국가 데이터국 신설 등을 통한 데이터 안보 대비 △국가행정민원(信访)국의 승격 및 고령화 대응 강화 등을 통한 내부 안보 대비 △농업농촌부 기능 강화를 통한 식량안보 대응 등 복합 안보에 대응하고 함.

■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이자 동력으로서 중국공산당에 의한 집중통일영도가 강조되었는데,³⁵⁾ 이번 조직개편에도 이러한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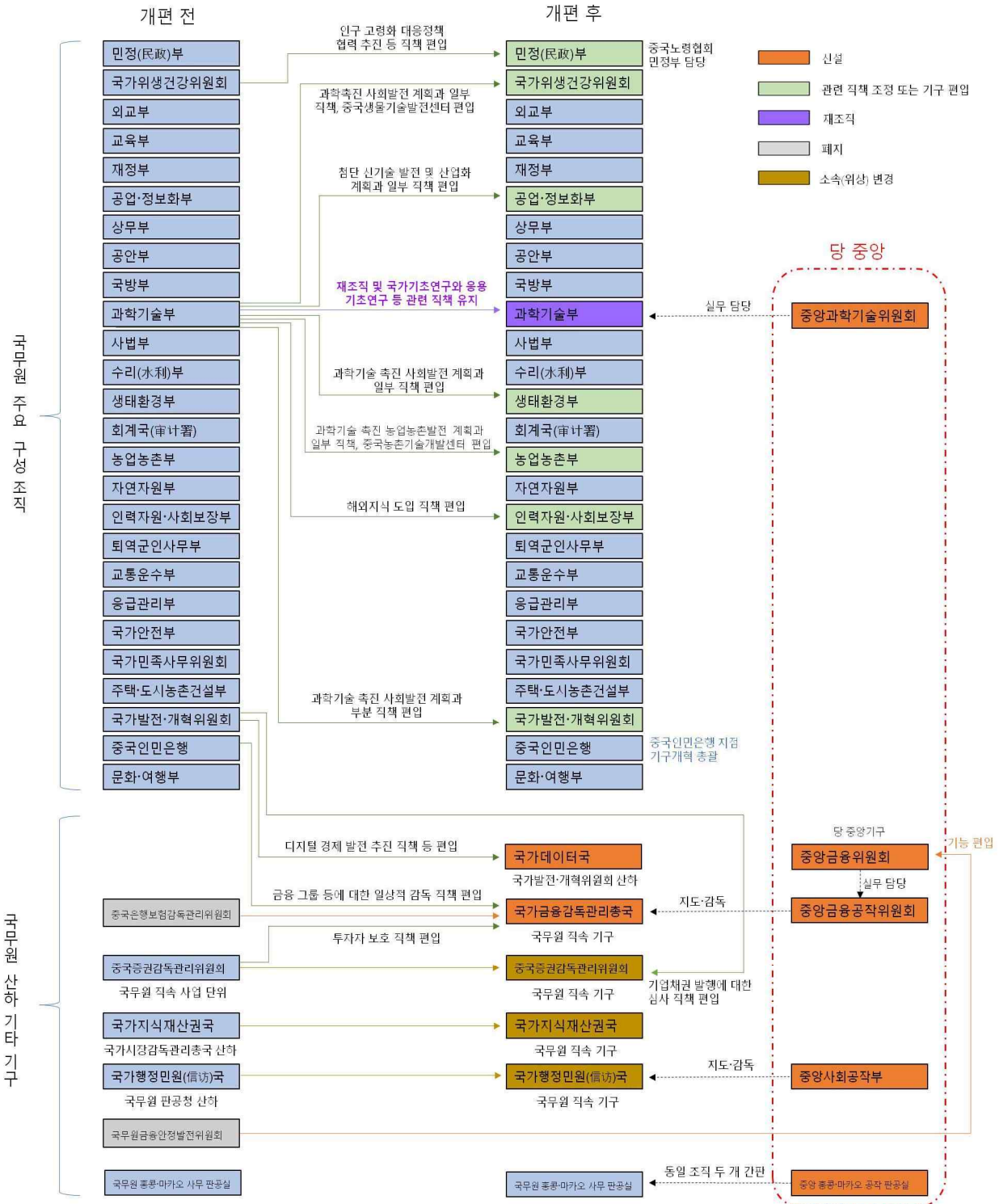
-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2023. 3. 16)에는 국무원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당중앙기구 개혁에 대한 내용도 일부 담김.³⁶⁾
- 이번 국무원 조직개편의 핵심 분야인 과학기술과 금융 분야, 그리고 사회 분야와 관련하여 당중앙에도 상응한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국무원의 해당 기구에 대한 당중앙의 지도·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당중앙에 중앙과학기술위원회(中央科技委员会)가 신설되어 이번에 재조직되는 국무원의 과학기술부를 지도·감독할 것으로 보임.
 - 당중앙에 중앙금융위원회(中央金融委员会)와 중앙금융공작위원회(中央金融工作委员会)가 신설되어 국무원의 금융 관련 기구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역시 신설되는 중앙사회공작부(中央社会工作部)는 국무원 직속기구로 조정되는 국가행정민원(信访)국에 대해 지도·감독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홍콩 및 마카오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당중앙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무원 산하에 있던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 판공실’을 당중앙 조직으로 옮겨 ‘중앙 홍콩·마카오 공작 판공실(中央港澳工作办公室)’을 신설함. 다만 국무원의 해당 판공실도 이름은 유지하게 되어 동일 조직이지만 두 개의 간판을 갖게 됨.

34) 허재철 외(2022), 「중국 20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2-15, p. 5.

35) 위의 자료, p. 2.

36) 「中共中央 国务院印发《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2023. 3. 16), 『中国政府网』, http://www.gov.cn/xinwen/2023-03/16/content_5747072.htm (검색일: 2023. 3. 17).

그림 1. 국무원 및 당중앙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



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번 조직개편의 모든 내용을 나타낸 것은 아님.

자료: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공동 발표한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2023. 3. 16) 및 언론보도(央视新闻, https://m.thepaper.cn/baijiahao_22247170)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인사

■ 전체적으로 2022년 10월 개최된 20차 당대회와 1중전회의 당중앙 인선 결과에 따라 예측됐던 인물이 예정된 요직에 임명되어, 당에 이어 국가기구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됨.

- [국가 최고 지도자] 시진핑(习近平, 당 총서기)이 국가주석, 한정(韩正, 19기 상무위원)이 국가부주석으로 선출됨.
- [군대] 시진핑(당 중앙군사위 주석)이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선출되고, 장여우샤(张又侠,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와 허웨이둥(何卫东,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국가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임명됨.
- [정부] 리창(李强, 당중앙 상무위원)이 국무원 총리로 선출되고, 덩썬샹(丁薛祥, 당중앙 상무위원), 허리펑(何立峰, 당중앙 정치국위원), 장궈청(张国清, 당중앙 정치국위원), 류궈중(刘国中, 당중앙 정치국위원)이 국무원 부총리로 선출됨.
 - 국무위원(5명): 리창푸(李尚福, 국방부장), 왕샤오홍(王小洪,公安부장), 우정룽(吴政隆, 국무원 비서장), 셴이친(谌贻琴, 당중앙 위원, 여, 바이족), 친강(秦刚, 외교부장)
- [국회] 자오러지(赵乐际, 당중앙 상무위원)가 전국인대 상무위 위원장으로 선출됨.
 - 전국인대 상무위 부위원장(14명): 리홍중(李鸿忠, 당중앙 정치국위원), 왕둥밍(王东明, 당중앙 위원), 샤오제(肖捷, 당중앙 위원), 정젠방(郑建邦, 당중리(丁仲礼), 하오밍진(郝明金), 차이다핑(蔡达峰), 허웨이(何维), 우웨이화(武维华), 테닝(铁凝), 펑칭화(彭清华), 장칭웨이(张庆伟, 당중앙 위원), 뤼쑹장쑤(洛桑江村, 장족), 쉘커라이티·자커얼(雪克来提·扎克尔, 위구르족)
 - 전국인대 상무위 비서장: 류치(刘奇)
- [자문기구] 왕후닝(王沪宁, 당중앙 상무위원)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전국정협) 주석으로 선출됨.
 - 전국정협 부주석(23명): 스타이펑(石泰峰, 당중앙 정치국위원), 후춘화(胡春华, 당중앙 위원), 셴웨이웨(沈跃跃, 당중앙 위원), 왕용(王勇, 당중앙 위원), 저우창(周强, 당중앙 위원), 파바라·거례랑제(帕巴拉·格列朗杰), 허후화(何厚铨), 량전잉(梁振英), 바터얼(巴特尔), 쑤후이(苏辉), 샤오홍(邵鸿), 가오원룽(高云龙), 천우(陈武), 무홍(穆虹), 셴후이(咸辉), 왕둥펑(王东峰), 장신즈(姜信治), 장궈쥔(蒋作君), 허바오샹(何报翔), 왕광첸(王光谦), 친보용(秦博勇), 주용신(朱永新), 양진(杨震)
 - 전국정협 비서장: 왕둥펑(王东峰, 부주석 겸)
- [기타]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류진궈(刘金国, 당중앙 기율위 부서기), 최고인민법원 원장 장궈(张军, 당중앙 위원),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잉용(应勇, 당중앙 위원)

■ 외교 및 경제 분야 주요 인사

- 구미(歐美) 및 대만 업무에 정통한 인물이 대외정책과 국방을 관장하는 조직의 수장을 맡음으로써 미중 전략 경쟁과 양안관계에 대비하여 인적역량이 보완된 것으로 평가됨.
 - 당중앙에서 외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왕이(王毅, 전 외교부장) 정치국위원의 경우 일본과 대만,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근무 경험이 풍부한 반면, 신임 외교부장으로 임명된 친강(秦刚)은 상대적으로 영국과 미국 등 구미 지역에서의 근무 경험이 풍부하며 강성(强性) 이미지로 평가받고 있음.

- 또한 친강(秦剛) 신임 외교부장은 양제츠(楊潔篪)나 왕이(王毅) 전임 외교부장과 달리 외교부장으로 발탁된 후 곧바로 국무위원까지 임명되면서 최고 지도부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시진핑의 책사’로 불리는 왕후닝이 전국정협 주석으로 선출되어 양안관계를 보다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위치가 되었고, 당 및 국가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임명된 허웨이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만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관을 맡은 인물로서 대만 문제에 정통한 군인이라고 할 수 있음.
- 당과 국무원에서 대만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중앙대만공작관공실,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의 주임에 당에서 대외업무를 담당하던 쑹타오(宋濤) 전 중앙대외연락부 부장이 임명되었는데, 이는 대만 문제의 국제적 성격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됨.
-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이 변경된 것 이외에 경제 분야와 관련된 국무원 부장(장관)급의 인사 변동은 없음.
 - 저장(浙江)성 성장과 장쑤(江苏)성 당서기, 상하이(上海)시 당서기를 역임한 리창 총리에 대해서 ‘친시장’, ‘친(민영)기업’ 성향이라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중앙정부에서의 경험이 없는 경제 비전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³⁷⁾
 - 리창 총리는 덩쉐샹 상무부총리 및 허리핑 경제담당 부총리와 함께 경제정책을 운영해나갈 것으로 보이며, 리창과 덩쉐샹은 과거 시진핑 비서였고, 허리핑은 시진핑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알려져 있음.³⁸⁾
 - 새로 임명된 정산제(鄭栅洁) 발개위 주임은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시진핑 주석의 간판 정책이자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안후이(安徽)성 당서기와 저장(浙江)성 성장(省長)의 이력 그리고 62세(1961년생)라는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주요 정치 엘리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퇴직연령 등으로 인해 교체가 예상됐던 이강(易綱) 인민은행 행장과 류쿤(劉昆) 재정부장이 유임되고 왕원타오(王文涛) 상무부장도 교체되지 않는 등 주요 경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수장이 유임되었는데, 이는 경제 안정운영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³⁹⁾

5. 평가 및 시사점

가. 평가

- [정부업무보고] 2023년 중국정부는 ‘안정 속 성장’과 ‘발전과 안보’를 거시경제정책 기조로 정하고, △내수 증진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 △경제안보 △민생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됨.

37) 「특파원스페셜」 "친시장과 경제 관료" vs "비경제 전문가", (2022. 11. 2),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21102083427247> (검색일: 2023. 3. 15).

38) 「習近平親信何立峰：如何實現習的經濟願景」(2022. 10. 24), 『紐約時報中文網』, <https://cn.nytimes.com/china/20221024/chinas-economy-is-in-trouble-xi-may-turn-to-he-lifeng-to-fix-it/zh-hant/>; SCMP, <https://multimedia.scmp.com/infographics/news/china/article/3185751/ccp-connections/index.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3. 3. 15).

39) "China chooses continuity, retaining central bank chief, finance minister"(2023. 3. 13),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chooses-continuity-retaining-central-bank-chief-finance-minister-2023-03-12/>(검색일: 2023. 3. 14).

- 2023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발전(发展)’, ‘안정(稳)’, ‘안보(安全)’, ‘소비(消费)’, ‘투자(投资)’, ‘개방(开放)’, ‘민생(民生)’이 2022년보다 많이 언급됨.
 - 중국정부는 미중 갈등의 심화와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지속 등의 대외 경제환경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 자국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 공급망 안정화, 국내 내수시장 회복, 경제 리스크 관리 등 경제 안정화 전략 추진을 최우선 목표로 함.
 - 또한 중국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둔화되었던 국내 경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비와 투자 회복을 통한 내수증진에 중점을 두어 경제 운영을 추진할 방침임.
- 반면 ‘성장(成长)’, ‘혁신(创新)’, ‘고용(就业)’은 전년보다 적게 언급됨.
 - 특히 성장은 한 차례만 언급되었으며, 이는 중국이 기존 경제성장 패러다임 속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고도화, 기술개발 혁신, 신항산업 육성 등의 ‘질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음을 시사함.
 - 2022년은 고용을 민생개선의 최우선 정책으로 선택하였다면 2023년 중국정부는 고용을 비롯한 교육, 사회보장, 민생상품 공급, 공공서비스 제공 등 다방면의 민생개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통하여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불만이 쌓인 민심 수습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

표 4. 2023년과 2022년 「정부업무보고」 주요 키워드

연도	안정	안전	발전	성장	개혁	혁신	개방	고용	민생	소비	투자	빈곤 탈피	코로나 19
2023	94	25	140	1	46	34	16	29	24	23	24	12	24
2022	81	18	129	12	44	39	12	32	22	15	21	7	16

주: 키워드 중 안정은 한 글자 ‘안(稳)’의 언급 횟수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키워드는 두 글자 이상 단어로 검색함.
 자료: 「2022년 정부업무보고」와 「2023년 정부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작성.

- [경제성장률] 중국정부는 ‘5%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잔존한 상황에서 시진핑 3기 첫 임기 성과를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 이번엔 제시된 2023년의 경제성장률 목표(5% 내외)는 2022년의 경제성장률 목표(5.5% 내외)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35년 중진국 진입’이라는 중장기 목표 달성⁴⁰⁾에 필요한 경제성장률 목표로 평가됨.
 - 최근 5년간(2018~22년) 중국은 미중 갈등,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다양한 경제 불확실성을 경험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5.2%를 기록함.⁴¹⁾
 - 2023년 지방 양회에서 31개 성(省)·시(市)급 지방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 목표가 5~6%임을 감안할 때, 5%는 중국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판단됨.
- ‘5%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중국경제에 대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을 고려할 때 중국정부가 시진핑 3기가 정식 출범하는 첫 해의 안정적인 임기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로도 해석됨.
 - 2022년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전망하여 ‘5.5% 내외’라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목표를 하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40) 14.5규획에서 중국은 ‘2035년까지 중진국 소득수준 달성’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연평균 4.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함. 현상백 외(2020), 「중국 14차 5개년 규획(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9, p. 2.

41) 「정부업무보고(2022)」.

- 2023년 중국은 리오프닝으로 경기회복이 확실시 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외 경제환경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 양회에서 21개 성(省)에서 2022년 대비 약 0.5~1% 정도 낮은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함.
- 2022년의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한 기저효과와 최근 중국의 경제회복 추이를 살펴볼 때, '5%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중국의 리오프닝이 빠르게 재개되면서 1~2월 소비와 서비스 생산 부분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투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⁴²⁾
- 다만 부동산 경기 부진과 대외수요 감소로 인한 무역 회복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거시경제 기초] 2023년에 확장적 정책기조는 유지하지만, 실물경제의 지원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선별된 분야에서의 유동성 지원 수준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 중국정부가 2022년 강도 높은 감세정책으로 사회 전반에 대하여 유동성 지원을 하였다면, 2023년은 재정구조개편에 중점을 두어 재정자원 배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점 분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2023년의 재정적자율은 전년대비 0.2%p 상향 조정되었지만, 코로나19 발생 초반(2020~21년)의 재정적자율보다는 하향된 수준으로, 중국정부는 과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한 경기부양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2년 코로나19의 중국 내 확산으로 침체되어 있는 국내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 중점 프로젝트 투자와 중소·영세 기업 지원 등 필요 분야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 특히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지방정부 이전을 활용하여 주민소득을 향상하고, 정부 주도로 중점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여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됨.
- 중점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예산 내 투자를 6,800억 위안(전년대비 400억 위안↑), 제조업 고품질 발전기금 133억 위안(전년대비 44억 위안↑), 대기·수질 오염 방지기금 587억 위안, 생태환경 조성 재정이전 1,091억 위안(전년대비 99억 위안↑), 취업 보조금 지원 668억 위안(전년대비 50억 위안↑), 의료 서비스 관련 재정이전 1,700억 위안, 저소득층 지원금 1,567억 위안 등 중점 분야 예산을 일부 상향 조정

■ [경제안보 강화] 양회에서 발표한 중점업무에서는 '발전과 안보의 균형'을 강조한 점이 특징인데, 이는 중국정부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평가됨.

- 2023년 중국정부는 △과학기술 자립·혁신 △산업·공급망 안정화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 △디지털경제 발전을 하나의 업무로 제시하면서, 경제안정에 기반한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을 강조함.
- 위의 분야들은 각각 2022년에 제시된 10대 중점업무로 과학기술 자립·혁신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었다면, 2023년에는 중국의 산업·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기술혁신, 디지털경제 발전,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의 전략적 세부 포지셔닝을 갖게 된 것으로 해석됨.
- 중국정부는 향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하며 반도체,

42) 2023년 1~2월 중국의 서비스 생산지수는 전년동기대비 5.5% 상승하며 2021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소비도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하며 2022년 연말부터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세를 반전시킴. 또한 동 기간 고정자산투자도 전년동기대비 5.5% 성장하며 회복세로 돌아섬. 海通证券(2023. 3. 15), 「消费和地产：修复的两条主线——1-2 月经济数据点评」.

항공우주, 양자컴퓨팅, AI 등 핵심 기술 공약을 위한 ‘신형거국체제’ 구축을 선언함.

- 이를 위하여 산업망과 혁신망을 연계하고 ‘과학-산업-금융’의 선순환고리를 형성할 계획임.
-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사회안정 내용이 추가되면서 관련된 기존의 금융 리스크 방지와 에너지·식량·광산 자원의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생명·재산에 대한 안전보장 내용이 강화됨.

■ **[방역 및 민생]** 2023년 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로 접어들며, 새로운 방역 시스템 구축을 진행함과 동시에 고용, 사회보장, 생필품 가격안정 등의 민생을 개선하여 경기둔화와 제로코로나로 피로도가 높아진 민심을 추스릴 계획임.

- 중국은 2022년의 방역 성과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정밀한 방역을 견지하는 정책의 시행으로 방역정책과 조치를 최적화 했으며, 백신과 의약품의 연구개발 촉진, 주요 방역물자의 생산 및 공급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방역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함.
- 하지만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의 시행으로 실물경제 하방압력의 증가, 내수 부진, 경기전망 악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고용과 사회보장 등에서 소외된 계층이 발생하며 민심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임.
- 이에 중국은 2023년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들어가며 새로운 방역 시스템 구축, 응급 대응 역량 제고, 도농간 의료자원 재배치 가속화, 노인층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 제고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임.
- 또한 고용과 주민소득 증대, 사회보장 범위 확대, 생필품 가격 안정, 공공서비스 확대 등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억제되어 있던 민심을 추스리면서 경제회복의 활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조직 개편: 금융]** 이번 조직개편에서 중국정부는 국무원 직속 국가금융관리총국을 신설하는 등 금융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도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됨.

- 국가금융관리총국 신설로 중국의 금융관리감독 시스템은 기존의 ‘1행 2회’에서 ‘1행 1국 1회’로 전환됨.
- ‘1행 2회’는 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이하 ‘은보감독회’),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이하 ‘증감독회’)를 의미하며, ‘1행 1국 1회’로 전환되면서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가 폐지되고 국가금융관리총국이 신설됨.
- 국가금융관리총국은 기존에 인민은행, 은보감독회, 지방금융감독관리국에서 분담하였던 금융업 관리감독기능을 중앙으로 집중시킨 것으로 보임.
- 이 외에도 중국은 중앙금융위원회 신설,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를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격상하였으며, 인민은행 지점기구 개혁 등 다양한 금융 분야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짐.
- 인민은행 지점기구 개혁으로 9대 권역의 분행이 철거되고 대신 31개 성급 은행체제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인민은행 지점 세분화를 통하여 통화정책의 정밀조준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해석됨.
- 증감독회는 기존 국무원의 사업 단위에서 직속 단위로 격상되면서 기존에 발개위에서 담당하던 국유기업 채권발행 심사기능도 수행하게 됨.
- 이번 조직개편은 중국이 △금융 분야의 중앙집권력 강화 △금융감독의 사각지대 근절 △금융리스크 방지효과 제고 △중첩관리로 인한 비효율 개선 등을 위한 행보로 분석됨.

- 인사 이동에서 2018년 3월에 임기가 시작된 인민은행 총재 이강(易綱)과 재정부 장관 류쿤(刘昆)이 모두 연임된 점도 금융 리스크 방지정책의 연속성과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정부조직 개편: 정치사회] 이번 조직개편에는 민심 이반에 대한 지도부의 경각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내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정책역량을 더욱 투입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조직개편은 20차 당대회에서 강조된 ‘집중통일영도’ 체제를 반영한 것으로, 중국의 차세대 경제사회발전 전략을 위하여 공산당 정책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사회 분야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 강화는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중 시위와 2022년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된 백지 시위 등으로 중국 지도부가 해당 분야에 경각심과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국가행정민원국을 국무원 판공청 산하에서 국무원 직속기구로 승격하고, 이를 당중앙에 신설한 중앙사회공작부를 통해 지도·감독함으로써 민심 관리에 당중앙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 다만 이러한 조직개편이 기민하게 민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활용될 것인지, 아니면 각 분야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임.

그림 2. 국무원 및 당중앙 조직개편의 방향과 주요 영역



나. 시사점

■ 시진핑 3기 정부가 2023년 거시경제 기조를 ‘경제안정’과 ‘안정 속 성장’에 중점을 둔 것은, 높아지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내수경기에 중점을 두어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중국의 대내외적 전략 변화에 따라 한국의 대중 협력관계 개선이 필요함.

- 중국은 2023년을 ‘경제발전의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시기’이며, ‘불확실성 요소가 증가하는 시기’로 평가함.
 - 이는 2021년 하반기부터 제기되었던 소비 위축, 공급 충격, 경제전망 악화의 경제 삼중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미중 갈등의 심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 중국정부는 내수회복에 중점을 두어 경제를 운영할 방침으로 소비 증진, 정부 주도 투자 확대, 자국의 공급망 안정화 등 국내 경제 안정에 집중된 경제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중국이 자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행하는 정책들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경쟁구도 변화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정책인 전정특신(专精特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 내 공급망 속 한·중 기업 간 경쟁구도를 분석하고,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포지셔닝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내수 확대전략과 리오프닝으로 다시 개방되는 중국의 소비시장에 대응하여 한국기업들이 보유한 경쟁력을 점검하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전략을 마련해야 함.

■ 이번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경제 분야의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지향적’ 조직개편을 감행하였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 금융, 디지털(데이터) 등 중국 경제발전 핵심 영역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당-국가체제⁴³⁾’ 속에서 중국 경제정책의 강도와 깊이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시진핑 집권 이후, ‘정치외교는 국가주석이, 경제는 총리가 맡는다’는 관례가 희석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과학기술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시진핑의 권력 강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국무원의 과학기술부를 재조직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과학기술위원회를 당중앙에 신설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당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음.
 - 국가금융관리총국 신설로 분산되어 있던 금융감독 기능이 중앙으로 집중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본시장 시스템과 금융기업의 투자환경 등에 대한 공산당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경제발전 핵심 분야에 대한 공산당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확대된 영향력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에서 과감한 정부 지원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변화하는 중국 경제정책의 강도와 깊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국은 과학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제1동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공략하기 위해 사회적 역량을 집중하여 목표를 실현하는 신형거국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 이로 인해 기술개발, 인재육성, 금융지원 등의 정책이 기술혁신과 자립을 위해 집중되어 추진될 것으로

43) ‘당-국가체제’는 당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강력한 지배 영향력을 가진 체제를 의미함. 양갑용(2019), 「중국 ‘당국가체제’의 역사적 맥락과 함의」, 『중국사회과학논총』, 1권 2호, p. 46.

전망되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보유한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경쟁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양회에서 중국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한 리스크 및 영향요소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통하여 관련 현안 발생 시 한국에 미칠 수 있는 2차 파급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함.

- 중국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위하여 △경제·금융 리스크 통제 △에너지 자원 안보 △공공안전 관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안보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임.
 -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인해 부각된 부동산 시장 리스크는 중국의 부실자산 및 지방정부 부채와 연계되어 있으며,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중국의 부채 리스크가 심화될 경우 중국의 경기둔화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에너지 자원 안보는 한·중 양국의 안정적 경제성장 및 녹색전환 등 차세대 전략산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에너지 자원과 원자재 확보는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
 - 2022년 코로나19 확산과 중국 경기 둔화로 증명된 바와 같이 중국의 공공안전은 더 이상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방역, 국방, 중대사고 및 재난 등의 발생으로 한국경제에 2차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은 경제안보 전략 수립에 있어서 중국발 리스크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시의 대응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국내경제 내실화와 더불어 무역·외국인투자·해외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외개방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무역체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로 확대되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응하여 한국은 국익을 고려한 원칙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이번 인사개편에서 중국 경제수뇌부에 친시장적, 친기업적, 친개혁적 인사들을 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대외개방을 통하여 △무역강국 건설 △외자 및 해외 투자 확대 △글로벌 거버넌스 적극 참여 등에 집중할 계획으로, 각 분야에서 한중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무역강국 건설을 위해 자유무역시험구 고도화를 추진하고 서비스·디지털 무역을 확대할 방침으로, 한국은 중국의 무역정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무역규범에 대한 제도적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외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자의 권익 보호와 내국민 대우를 시행할 계획으로, 중국정부가 장려하는 선진제조업과 첨단기술 등 혁신경제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안보와 연관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외국인투자금 회수, 시장진입 제도적 제약 등 대외개방 이면의 영향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대중국 투자에 대한 제도적 비관세 장벽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를 비롯한 다양한 다자협력 체제에 적극 참여하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미중 갈등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블록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경제 협력국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할 때 한국도 국익에 따라 필요 분야의 다자협력체에 참여함으로써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KIEP

부표. 2023년 경제운영 10대 중점 업무

중점 업무		주요 내용
1	방역 시스템 구축	‘2급 감염병의 2급 관리’ (乙类乙管) 상시화 - 코로나19 상시 조기경보(预警能力) 시스템 강화 및 정보보고 체계 구축 - 코로나19 동향 분석을 통해 적시에 정확한 예보와 필요한 긴급 방역조치 시행 - 노인층의 백신 접종률 제고, 중요 방역대상(노인, 아동 등)에 대한 예방과 치료 추진 - 의료자원 재배치를 통해 농촌의 방역역량 제고 - 공공위생 방역 제고 및 방역 관련 인프라 건설 강화, 시설 개조를 통해 대형 도시 외곽 내 평시 (혹은 긴급 상황시) 필요한 방역자원 마련
		의료물자의 공급 보장 - 주요 의료물자의 생산과 공급 강화 - 비축 목록과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과 물자의 통합 배치 시스템을 완비하여 의약품, 설비 등 분야의 취약점 보완 - 의료물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증상(경증·중증·긴급 상황), 상황(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장소(양로원, 복지원)에 따라 우선적으로 의료물자 공급 - 대형 체인 약국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 분배 효율성 제고, 시장단속을 통해 방역 관련 약품의 가격 인상 없는 공급 보장 - 의약품의 생산, 비축, 운송, 사용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품질의 안전 확보
		의료환경 개선 - 도시와 농촌의 위생 관리 강화, 중점 지역·중점 장소의 위생 단속 강화, 농촌 위생 관리 상시화, 바이러스 번식지에 대해 상시화된 위생 관리를 시행하여 감염병 전파를 효과적으로 예방 - 의료·보건 및 환경 인프라 개선, 주요 감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환경 구축
		건강한 사회건설 추진 - 상시화된 등급별 의료 분류 시스템 구축 강화, 공립 의료기구를 주제로 한 3급 의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 의료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 국가 의학센터 건설 추진 - 전국적으로 지역별 국립 의료센터 분포를 계획하고, 성급 지역의 의료센터 건설 추진 - 기층 의료(基层医疗)⁴⁴⁾ 서비스 강화 - 국가 중의학 계승 혁신센터, 국가 중의학 감염병 예방기지, 중의학-양의학 협동 ‘플래그십(旗舰)’ 병원, 중의학 특색 중점병원 등 중의학 계승 혁신 관련 중대 사업 추진
2	내수확대	소비 잠재력 방출 - 소비회복 및 확대를 우선시하고, 소비능력 강화·소비 조건 개선·소비 방식(场景) 혁신 - 우수한 품질, 합리적 구조의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급 구조를 구축하고, 전통 소비 업그레이드, 신형 소비 육성 등 - 자동차 등 대중소비 안정화, 주차시설 개선, 도로·휴게시설·주거지역의 전기차 충전소 건설 확대, 공공 영역의 전기차 확대 추진 - 친환경 스마트 가전, 친환경 건축자재 등 구매 지원 장려, 가전 생산업체의 회수 목표 책임제 지속 전개 - 생활 서비스 소비 회복 촉진, 미니멀 여행(微旅游)⁴⁵⁾ 농촌 관광 등 적극 발전 추진 - 유급휴가 제도 실시 - 즉시배송 소비(即时零售),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비대면 전시회 등 신모델 발전 추진, 몰입형 대화형 구매(沉浸式交互式购物) 경험 확대 - 거주형⁴⁶⁾·개선형⁴⁷⁾ 주택, 신에너지 자동차⁴⁸⁾, 양로 서비스, 교육의료,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소비 지원 - 정보 소비 육성 위해 스마트 상권·스마트 상점·스마트 관광지·관광도시 및 녹색상점 시범 조성 추진 - 유명한 전통 브랜드(老字号) 혁신 발전 촉진 - 2023년 중국 브랜드의 날 관련 행사 개최, 중국 브랜드 지명도 및 영향력 제고 -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 소비재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유효투자 확대 - 2023년 중앙정부 예산 6,800억 위안 투입, 투자구조 개선 - 국가중점발전전략 및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공급망 안전, 국가안전 및 민생 등에 중점 - 14차 5개년 계획의 102개 프로젝트 건설 추진 - 프로젝트에 따른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중앙정부 예산 내 투자, 지방정부 특별채권, 정책성 금융 도구, 제조업 중장기 대출 등을 종합하고, 토지, 에너지 등 각종 요소보장 강화 - 산업 및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한 투자 확대 - 도시 재생활동 실시, 도시 노후 단지 재개발 가속화 - 민간투자 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환경 조성, 민간자본의 국가 주요 프로젝트 건설 참여 장려, 민간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치 마련 - 부동산 투자신탁(REITs) 상시 발행 추진, 재고자산 활성화 - 국가 주요 건설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현재 및 향후에도 이익이 되는 핵심 프로젝트 추가 - 투자 프로젝트 승인허가제도 개혁, 투자 관리 규정 및 문건 개정, 투자 규제 통일성 강화 - 투자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 응용 심화, 은행 등 금융기관의 투융자 승인허가 데이터 공유기제 마련

중점 업무		주요 내용	
3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 산업·공급망 안정화	주요 인프라 건설 추진	- 인프라 배치, 구조, 기능, 시스템 통합 최적화를 추진하고, 현대화 인프라 체계를 구축 - 환장(川藏)철로, 연강연해(沿江沿海) 고속철도, 국가 수도망(水网) 등 중요 프로젝트 건설 추진 - 중요 취수, 홍수 및 재해 방지, 서부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신통로, 샤오양산(小洋山) 북측 컨테이너 부두 개발 건설 가속화 - 환장(川藏)도로 G318선 보수, 국도 G219선, G331선 연결 구간 건설 가속화 - 중서부 철도, 창장(长江) 황금수로, 중점 도시군의 도시간 철도 및 교외지역 철도 건설 추진 -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 등 신형 인프라 건설 가속화 - 스마트 하이웨이 건설 추진, 하이난 상업 우주 발사장 건설 가속화 - 디지털 인프라 업그레이드, 정보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 가속화, 클라우드 네트워크 융합 및 컴퓨팅 네트워크간 연계 발전 추진
		과학기술 자립자강 강화	- 신형거국체제(新型举国体制)의 우세를 발휘하여 국가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기술 경쟁에서 승리 - 과학기술 기초 역량 강화: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 국가 제조업 혁신센터, 지역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 추진, 전국 중점실험실 체계 개편, 국가 하이테크 산업단지 및 자주혁신 시범구의 질적 발전 촉진, 국가기술혁신센터, 산업혁신센터, 엔지니어링 연구센터, 기업기술센터 신설 - '과학기술 혁신 2030 중점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 제조업 등 중점 산업망을 중심으로 양질의 자원을 집중하여 핵심기술 연구 추진, 독자적인 혁신 제품 및 오픈소스 기술 등 응용 추진 가속화 - 기업 혁신 지위를 강화, 기업 주도의 산학연 융합 심화,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산업화 수준 제고, 과학기술형 중소·영세기업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과학기술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국가급 혁신 플랫폼 건설 참여 지원, 우수기업의 커창판(科创板) 상장 촉진 - 과학기술 관리 시스템 개혁 심화 - 지적권 창조·활용·보호 및 서비스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 - 과학의 대중화와 전 국민의 과학적 소양 향상 추진
		산업구조 고도화	-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23년판) 수정 및 공포, 산업 인프라 재건 및 핵심 기술 장비 난관 극복 프로젝트 실시, 전통산업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제조업의 첨단화·스마트화·녹색화 발전 추진 - 녹색제조 공정 실시, 산업 중점 영역에서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노력 지속 - 전통산업 개혁 및 업그레이드 중점 추진, 철강 등 핵심 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기업의 기술 개혁 및 설비 업그레이드 촉진 - 에틸렌 등 석유화학 산업배치 최적화, 현대 석탄 화학 산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 세계 일류 석유화학 산업 기지 및 기업 육성 - 신에너지차 산업 배치 최적화, 배터리 교환 모델 및 연료전지 자동차 시범 추진, 신에너지차 동력전지산업 지속 발전 추진 -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 육성, 선진제조업 클러스터 발전 가속화, 신에너지 자동차·5G·태양광 등 비교우위 산업의 선도적 지위 유지, 바이오 경제·베이더우(北斗) 위성 관련 산업·수소 에너지 산업 발전 추진, AI·바이오 제조·녹색 및 저탄소·양자 컴퓨팅 등 첨단기술의 R&D와 응용 확대 - 스마트 건축 발전, 현대 서비스업과 선진 제조업 및 현대 농업의 융합 촉진 - 품질 강국 건설 추진 - 현대 물류 시스템 구축 가속화, 물류 인프라 네트워크 완비, 유통 원가 절감 추진
		디지털경제 발전 가속화	- 디지털 산업의 혁신 발전 촉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생태 주도형 기업 및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육성 - 데이터 재산권 제도와 데이터 거래 시장 등 기본 제도 관련 정책 연구 및 제정, 오픈소스 시스템(开源体系) 구축을 위한 정책 설계 강화 - 디지털 기술과 실물경제의 융합 심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적 조치 완비, 실물경제의 질적 발전 지원 - 차세대 정보기술과 제조업의 융합 발전 심화, 스마트 제조 공정 심화 추진, 제조업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스마트화 촉진, 스마트 농업 혁신 발전, 디지털 상거래 발전을 통한 농업 진흥(数商兴农) 추진 - 전자상거래의 고품질 발전 촉진, 라이브 커머스·즉시 배송 전자상거래(即时电商) 등 신모델·신업태 발전 적극 지원 - 플랫폼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플랫폼 기업의 기술 혁신 지원, 국제화 수준 제고, 발전 선도·일자리 창출·글로벌 경쟁 등의 측면에서 역할 발휘 - 양자·다자간 디지털경제 거버넌스 협력 전개, 디지털경제 기업의 해외진출 장려
		산업 및 공급망 안정 촉진	- 산업·공급망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기업 및 산업단지의 역할 발휘 -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 제고, 산업·공급망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조치 실시, 산업 사슬의 취약한 부분 보강, 전체 산업망 고도화 촉진

중점 업무		주요 내용	
4	중점영역 개혁 심화		- 국내 광산 프로젝트 추진 지원, 자원 탐사 및 개발 역량 강화, 광물자원 보장 역량 강화 - 물류 원활화 추진, 에너지·식량·의료물자 등 전략 물자의 안정적인 유통 보장 - 다층적인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완비, 리스크를 적시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시장 활력 부여	- 국유경제와 민영경제를 의미하는 ‘두 개의 흔들림 없음(两个毫不动摇)’을 견지, 법률에 의거하여 각종 경영주체의 재산권 및 합법적 권익 보호 - 기업 관련 법률, 법규, 정책 전면 수정 및 개정 - 국유경제 관리 강화 및 개선, 국유자본 기업 개혁 심화, 국유자본 배치 최적화 및 구조 조정 지속, 새로운 국유기업 개혁심화 행동방안 제정 - 혼합소유제 개혁 심화,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 개선, 혁신형 국유기업 설립, 글로벌 일류 기업 육성 가속화 - 민영기업 재산권 및 기업이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 민영경제 및 민영기업 발전 장려 지원, 민영기업의 국가중요전략에 통합되고 서비스되도록 지원(支持民营企业融入和服务国家重大战略), 민영경제 연계 도시 및 2기 지방 지원 민영기업 개혁 발전 지원 방법 확정 -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발전 지원, 중소기업 관리 서비스 강화 - 정부·기업 간 친화적이고 청렴한 관계 구축(构建亲清政商关系), 각종 소유제 기업의 공정한 경쟁과 발전 가능한 환경 조성 - 우수 중소기업 육성체계 완비, 전정특신(专精特新) 중소기업⁴⁹⁾ 육성 - 체납 중소기업의 회계 청산 업무 실시 - 기업가 정신 고취, 국유기업은 두려워하지 않고 일하고(敢干), 민영기업은 과감히 도전하고(敢闯), 외자기업은 과감히 투자(敢投)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높은 수준의 시장 체계 구축	- 전국 통일 대시장(统一大市场)⁵⁰⁾ 건설 추진, 재산권 보호·시장 접근·공정한 경쟁·사회신용 등 시장체계 기초 제도 개선 - 시스템 통합, 고효율의 요소시장화 분배 개혁 가속화 추진 - 선전에 중국특색사회주의 실행시범구 건설을 위한 시장진입 완화 특별조치 실시 - 공공자원 거래 플랫폼의 통합 및 공유를 심화하고, 공공자원 분배 효과 및 효율 향상 추진 - 조달입찰 개혁 심화, 정부 구매 법규 등 개선, 입찰 과정의 디지털화 전환 촉진
		비즈니스 환경 개선	- 행정 간소화, 권한 이양, 서비스 개혁 최적화 - 법률에 의거한 행정 집행, 계약 준수(遵守契约) 등을 통한 정부 공신력 제고 및 집행력 향상 - 공정 경쟁 심사제도의 강성 제약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 및 규범성 문건 지속 개정 등 실시 - 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지역 지정 실시 - 중국 비즈니스 환경 평가 체계 개선, 장기적 효과 촉진 메커니즘(长效机制) 구축 - 중점 지역, 공업 단지 등의 비즈니스 환경 수준 제고 행동 방안을 제정, 도시군 및 도시권의 비즈니스 환경 균등화(一体化) 발전을 추진 - 기업 비용 징수(收费)에 대한 장기 효과 발휘 감독관리 기제 마련 - 전국 일체화 정부 서비스 플랫폼 ‘온라인 업무 처리(一网通办)’ 허브 역할 강화, ‘업무 1건 당 1회 방문 처리(一件事一次办)’⁵¹⁾ 개혁조치 실시, 지역간 동일 수준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품질 향상 - 기업신용 현황 종합평가체계 구축, 기업 신용 리스크 분류 관리 추진, 사회 신용 통일 코드 시스템 제도 개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편의성 촉진
		중점 영역 개혁 추진	- 재정 및 조세 시스템 개혁, 재정 이전 지출(转移支付) 체계 개선, 성(省)급 이하 재정 시스템 개선, 지방세 및 개인소득세 관련 시스템 개선 - 예산 제도를 개선하고, 중점 지출 정책의 성과 평가를 강화 - 금융체계 개혁 심화, 현대 중앙은행 제도를 개선, 보편적 혜택 및 민영기업의 금융서비스 개선 등 - 자본시장 개혁 심화, 다층적 자본시장 체계 정비, 자본시장 기능 개선, 직접 용자 비중 확대 - 유류·가스 체계 개혁 심화, ‘전국을 하나의 네트워크(全国一张网)’로 통합하고, 유류·가스망 운영 체계를 개혁 - 지역간 천연가스 운송 원가 감독 심사 및 가격책정 업무 전개를 실시하고, 판매가와 구매비용 연동 메커니즘을 개선 - 철도의 시장화 개혁 추진 - 전력 시스템 개혁 추진, 국가통합 전력시장 시스템 건설 추진, 지역간 송전 시 전력가격의 시장화를 추진 - 신에너지(태양광, 풍력, 수소 등)를 사용한 발전가격의 시장화 개혁을 심화하고, 난방 가격 메커니즘 개선 - 자연 독점영역 기업의 감독 관리를 강화 - 중앙직속 및 지역의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 원가 감독관리 전개, 농업 용수 종합 개혁 추진 - 산업협회 및 상회 개혁 추진, 분류 감독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표준화된 발전 촉진

중점 업무		주요 내용	
5	농업·농촌 우선 발전 및 농촌 진흥	식량안보 기반강화	- 식량안보와 경작지 보호에 대해 당과 정부에 공동 책임을 부과 - 식량의 주요 생산지 및 판매지에 대한 지원정책 개선 - 곡물생산계획(千億斤粮食产能提升行动) 실시, 흑토(黑土地)⁵²⁾보호 프로젝트 실시, 국가 식량안보 산업벨트 건설 가속화 - 식량 비축 물류시설 건설, 재고식량의 합리적 판매 추진 - 벼, 밀의 최저수매가격을 합리적으로 제정, 옥수수와 대두 생산자 보조금과 벼 보조금 정책을 안정적으로 실시, 면화 목표가격 정책을 개선 - 현대 재배업 발전, 재배업 진흥 행동방안 실시, 국가 대두 종자기지 건설 추진 - 농업의 핵심기술 역량 강화, 국가 식량 긴급보장 메커니즘 구축 - 화학비료 등 농업물자 공급과 가격 안정 메커니즘 완비 - 돼지(生豬) 생산과 공급 안정세 유지, 초지 축산업의 구조전환과 발전 추진 - 식품자원 보장 및 각종 식품의 유효한 공급을 위한 지도의견 제정, 시설 농업을 발전시키고 식품 공급 다원화 메커니즘 구축
		탈빈곤 성과 공고화	- 빈곤 탈피 후 다시 빈곤 상태로 회귀하지 않도록 동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규모 ‘빈곤 회귀’ 방지 - 인프라 여건 개선을 통해 탈빈곤 지역의 산업진흥 추진 - 빈곤층에 대한 이주 및 안정적인 정착·취업·소비 지원 확대, 정착지에 대규모 신형 도시화 건설 추진 - 탈빈곤 노동자 취업규모를 3,000만 명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제공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제고 - ‘만 개 기업을 통한 만 개 마을 지원(万企兴万村)’ 활동 추진
		산업간 융합발전 추진	- 신형 농촌 집체경제, 농업의 적절한 규모경영 발전 - 농촌 특색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업 현대화(농업 현대화 시범구, 국가 농촌산업 융합발전 시범구, 특화산업 클러스터, 국가 현대 농업단지, 농촌 산업 메커니즘 완비 등), 농민소득 증가 등 추진 - 농림 폐기물 자원화 이용을 강화하고 순환형 농업발전 모델 추진 - 현(縣)급 경제를 발전시키고 현(縣)의 도농간 융합발전 추진, 도농 통합의 취업, 교육, 의료, 양로 등 정책 시스템 구축 - 중점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고 농촌 토지제도 완비, 주택용 토지제도 개혁 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농촌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화 개혁시범 추진
		농촌 현대화 추진	- 농촌의 인프라 건설을 통한 정주 여건 정비 - 농촌의 수자원 보호 강화 - 농촌의 공공 인프라 건설 확대 및 농촌 도로유지 보수 메커니즘 개혁 - 농촌 전력망 확대공사 추진 및 안정적인 급수 보장 - 농촌의 물류 핵심 네트워크 구축(3급 전자상거래와 우편물 배송 시스템 완비) - 농촌 주택의 품질·안전 제고 공사, 마을 위생요건 강화, 화장실 개조 추진 등 주거환경 개선
6	지역 균형 발전 및 신형 도시화 건설	지역간 균형발전 전략 추진	- 서부대개발 정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의 발전 추진, 국가발전 전략 실시를 촉진 - 동북전면진흥 정책과 조치를 통해 새로운 성과 달성, 동북지역의 중심도시와 도시군의 질적 성장을 지원, 국가 식량, 생태, 에너지 등 안보 확보 - 중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첨단제조업 중심의 현대화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며, 연도별 중요 프로젝트 시행, 동부지역의 현대화 발전 장려 - 중서부와 동북 지역의 개방도를 높이고 동부 연해지역의 선도적 개방지위 확대, 장시(江西) 등 내륙지역의 개방형 경제실험구 건설 - 국가급 신구(新区)의 역할 강화, 혁명지역, 접경지역, 생태퇴화지역, 자원 의존형 지역, 노후 공업도시 등 발전 추진, 국경지역의 안정과 발전 추진 - 해양혁신 시범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양강국 건설 가속화
		지역발전 중대전략 심화	- 징진지(京津冀) 협동 발전을 추진하고 베이징의 비수도기능을 이전, 고표준·고품질의 숭안신구 건설, 베이징 내 부도심 센터 건설, 톈진 빈하이신구와 톈진 북방국제항운 허브 건설 가속화, 징진지 생태환경 공동 건설·관리 추진 - 창장삼각주 경제벨트의 녹색성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생태환경 시스템과 오염 단속 ‘4+1 공장’ 추진 - 웨강아오다원취(粤港澳大湾区)의 혁신발전과 시장 통합 수준 향상 - ‘14.5 창장삼각주 통합 발전계획’ 실시, 혁신과 산업 간 심층 융합 촉진, 상하이 5대 센터 건설 가속화, 창장삼각주 녹색 통합발전 시범구 등 중점 지역의 개혁과 혁신 추진 - 황허 유역에 대한 ‘3+1’ 종합 단속 추진, 황허 유역의 생태보호 추진, 중상류지역의 수토유실(水土流失) 예방 강화

중점 업무		주요 내용	
7	대외개방	주체기능구 전략제도 및 시스템 개선	- 전국 국토공간 계획강요를 제정하고 주요 전략을 세분화하며 주체기능구 제도를 완비 - 국토 공간 용도 관리단속 제도를 완비하고 '삼구삼선(三区三线)'으로 공간을 엄격하게 관리, 주체기능이 뚜렷하고 상호보완이 가능한 국토공간 개발 및 보호 구조를 형성
		사람 중심의 신형도시화 건설	- 농업 전이인구의 시민화 가속화 및 호적제도 개혁 추진, 도시 공공서비스 균등화 추진, 농업 전 이인구의 취업·기능 교육·사회보험 등 도시 기본 공공서비스 보장 수준 강화 - 대·중·소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구조 형성, 청위지역 쌍성경제권(成渝地区双城经济圈) 건설 추진, 현대화 도시권 육성, 특대도시 발전방식 전환 가속화, 현(县)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 건설 중점 추진, 도시군과 도시권의 현대화 인프라 시스템 구축 지원 - 도시계획·건설·거버넌스 수준을 향상, 도시 인프라 건설 강화, 살기 좋은 스마트 도시 건설 - 도농 융합발전 메커니즘과 정책 시스템 완비, 도농 간 생산요소의 이동 원활화
		무역강국 건설 추진 가속화	- 수출의 안정적인 발전 촉진, 국제시장을 다원화하여 개척, 가공무역의 수출 부가가치 제고 - 무역의 혁신 발전 적극 추진, 국경 간 전자상거래·시장조달 무역 방식 등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모델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해외 창고 발전 지원 - 중서부 및 동북 지역으로의 가공무역 이전 지원 - 통관 편리화 개혁 심화, 주요 항구와 공항의 원활한 화물 운송 보장 -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가속화 - 자유무역시험구 고도화 전략 시행,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및 린강신구(临港新片区) 건설 행 동방안 제정·공포 - 서비스무역 확대, 서비스무역 발전 메커니즘 혁신, 국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구 건설, 자유 무역시험구 및 전국판 국경 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공포 - 디지털무역 적극 발전 추진
		외자 이용 및 해외투자 확대	- 외자 유치 및 이용 확대,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및 신(新)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 심화 추진, 시장진입 확대, 현대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 확대, 외자의 R&D 센터 설립 장려 - 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험구 건설 심화 추진 - 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각종 개발구 및 보세구 등 개방 플랫폼의 선행적 역할 발 휘, 각 단지의 투자 유치 역할 발휘 -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시행 - 전방위적인 외채관리 강화 - 역외(境外) 투자 서비스, 관리감독 및 리스크 예방·통제 강화 - 해외투자 관리의 디지털화 수준 제고 - 해외 광물자원 개발협력 촉진 - 자본시장의 제도적 양방향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
8	녹색 저탄소 발전	'일대일로' 고품질 발전 추진	- '일대일로' 출범 10주년 관련 주요 업무 계획·추진 - 핵심 지역·국가·분야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협력국가와의 실무 협력 확대 - '작고 아름다운(小而美)' 프로젝트 추진 심화, 상징적인 프로젝트 시행 - 국제 생산능력 협력 및 제3국 시장 협력 심화 - 새로운 협력 분야 지속 확장, 보건·녹색·디지털·혁신 실크로드 건설 심화 - 실크로드 전자상거래(丝路电商) 협력 선행구 건설 - 지역 개방 구도 최적화, 푸젠성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핵심지역의 고품질 발전을 확고히 추진, 접경 중점 개발개방 시험구 건설 심화 추진 - 인프라 상호 연결 협력 추진 - 중국-유럽 화물열차(中欧班列)의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운행 보장 - '실크로드 해운(丝路海运)' 등 '일대일로' 관련 브랜드 영향력 지속 확대, '공중 실크로드(空中丝绸之路)' 건설 촉진 - 역외 프로젝트의 리스크 예방·통제 전면 강화 -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준비·개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적극 참여	- 다자간 무역 체제를 확고히 수호 - WTO 개혁에 전면적으로 참여, RCEP 지속 추진, CPTPP와 DEPA 가입을 적극 추진 - 더 많은 국가 및 지역과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를 심도 깊게 추진 - UN, G20, APEC, BRICS,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SCO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 강화
		녹색 저탄소 산업 발전	- 녹색제조53)를 적극 추진하고, 공업, 건설, 교통 등 중점영역에서의 녹색전환을 가속화하며, 공정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등 지원 추진 - 현성(县城)급 도시의 용수관에 대한 누수 관리를 실시하고, 해수 담수화 촉진 등 수자원의 집약 적 이용 추진

중점 업무		주요 내용	
			- 순환경제의 발전을 추진하고, 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녹색소비 장려 - 에너지·식량·광물 등에 대한 사용 절약을 추진하고, 녹색생산 및 생활방식 전환 가속화
		환경오염 방지	- 대기오염 방지 캠페인 지속, 오염물 배출 통제 실시 - 수질 종합 관리를 추진하고, 도시의 하수처리 관리 정비 및 주요 해역에 대한 종합 관리 실시 - 경작지 및 건설용지 등에 대한 안전 수준을 개선하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 이용을 촉진하며, 고체 폐기물 및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에 대한 관리 추진
		생태계 관리 강화	- 중요 생태계 보호 및 복원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대규모 국토 녹화행동 전개 - 강·하천·호수·폭포·습지 등 생태계 복원을 강화하며, 국립공원을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고 국가 생태안전 보호체계에 포함 -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막고, 생물 다양성 보전 중요 프로젝트를 실시 - 생태계 보호보상 조례(生态保护补偿条例)를 실시하고, 타이후(太湖) 등 중요 유역 생태계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 - 해양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추진
		탄소중립 추진	- 에너지 소비 총량 및 효율지표 조정, 우선적으로는 화석에너지 소비 통제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점진적으로 이중 통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 - 석탄 사용 효율화 기술 연구, 2차 대형 풍력 태양광 설치 프로젝트 추진 및 3차 프로젝트에 대한 착공을 통해 에너지 저장산업 건설을 추진 - 선진화된 에너지 절감, 탄소 저감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무탄소 및 탄소 네거티브 시범 프로젝트 추진, 저탄소 시범 도시 건설 - 탄소배출권 통제 시스템 개선 및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관리업무 수행, 제도 보완, 데이터 조작 행위 관리감독 강화 - 대규모 자연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통해 탄소 흡수 능력 개선 추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상에 적극 참여
9	국가안보 및 사회안정	경제·금융 리스크 통제 강화	- ‘집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이라는 정책기조 유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장기 메커니즘 시행 - 차별화된 주택 신용대출 정책 시행,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의 역할 발휘, 거주형·개선형 주택 수요 지원 - 신시민(新市民), 청년 등의 주택문제 해결, 보장성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장기 임대주택 시장의 발전을 규범화 - 부동산 기업 리스크 관리 강화 - 부실 자산 반등에 적극 대응, 중소은행·보험 및 신탁기관의 개혁 추진 - 현대 금융 관리감독 강화, 모든 유형의 금융활동을 법에 따라 관리감독 - 국제 경제·금융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면밀히 추적하여 분석 -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완화, 채무 기한 구조 최적화, 이자 부담 경감
		에너지 자원 안보 보장	- 에너지 혁명 심화, 신형에너지체계 계획·구축 가속화, 에너지 생산·공급·비축·판매 시스템 구축, 에너지 안전 생산 책임제 완비 - 현대식 광정(矿井)을 높은 수준으로 건설, 발전용 석탄의 중장기 계약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철도 등의 수송력 보장 강화 - 전력 생산·공급 역량 향상, 석탄화력발전 등 신뢰성 있는 전력원 건설 확대, 특고압 송전선로 건설 가속화, 수력발전 개발과 생태 보호의 전면 계획 수립,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강화 - 국내 철광석·칼륨·리튬 등 자원 개발 프로젝트 지원, 석유 자원 탐사·개발 역량 확대, 국내 석유 및 천연가스의 비축·생산 증대 - 유류 제품 관리 시스템 완비 -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보장 - 국가 비축 시스템 구축 강화, 닝보(宁波)·저우산(舟山) 국가 벌크상품 저장 및 운송 기지 전면 건설
		공공안전 관리 수준 제고	- 중점 업종 및 분야의 안전 관리감독 강화, 중대 사고의 발생 예방 및 억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장 - 재해 방지·감소·복구 및 돌발적인 중대 공공사건 관리역량 제고, 국가·지역의 비상대응 역량 강화 - 식품 및 의약품, 핵심 공산품, 특수 설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 - 사이버보안 유지 - 사회 치안의 종합적인 관리 강화, 평안중국(平安中国) 건설 추진, 중대 사회 문제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 전반의 안정 유지
10	민생 개선	취업 확대	- 대학 졸업생의 시장화·사회화 취업 경로 확대, 공공부문의 일자리 규모 안정화, 농민공의 취업 확대 촉진, 퇴역 군인의 정착 및 취업 보장, 취업이 곤란한 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취업 지원 지속 실시

중점 업무	주요 내용
	- 창업을 촉진하여 고용 확대, 혁신 시범기지 건설 지원, 새로운 취업 형태의 발전을 지원하고 규범화 - 기업이 일자리를 안정화하도록 지원 - 평생직업 기능훈련 제도 완비, 높은 수준의 인재양성 기지 건설 - 취업 공공서비스 체계 완비 - 고용 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제한과 차별 해소
주민 소득 증대 촉진	- 저장성의 고품질 발전과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을 지원하는 '1+N' 정책 시스템 완비 - 합리적인 임금인상 시스템 완비,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기준 조정 지도 - 중저소득층의 요소소득 증대, 주민 재산소득 증대, 농민 소득 증대 촉진,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 중간소득계층 지속 확대 - 소득 분배 질서와 부(富) 축적 메커니즘 규범화 - 자선사업 발전 시스템 완비, 자선사업의 3차 분배 역할 발휘
교육 시스템 수준 향상	- 교육 강국 추진 프로젝트 시행 -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과 도농일체화(城乡一体化) 가속화, 지역의 교육 자원 배치 최적화, 취학 전 교육과 특수 교육의 발전 강화 - 직업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의 시너지와 혁신 추구 - 뛰어난 혁신 인재 양성 강화 - 중국 특색의 세계 일류 대학 및 학과 설립 가속화 - 사립교육의 발전 규범화
사회보장체계 완비	- 양로보험의 발전 규범화, 개인 양로금 발전 촉진 - 기본양로보험의 전국 통합제도 완비, 기본의료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의 성(省)급 통합 관리 추진 - 중대질병 보험과 의료 지원제도 완비 - 농민공·프리랜서(灵活就业人员)·새로운 취업 형태의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가입 메커니즘 개선, 새로운 고용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상해보장 시범 심화 실시 - 장기간병 보험제도의 시범 범위 확대 -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체계 정비
민생 필수 품목의 공급·가격 안정	- 곡물·기름·고기·계란·채소 등 민생 필수 품목의 공급과 가격 안정 추진 - 교외 대형창고 기지(城郊大仓基地)를 배치하여 도시에 생활물자 비상공급 역량 제고 - 농산물, 석탄 등 핵심 품목의 원가 조사를 통해 공급과 가격 안정 유지 - 가격 관리감독 강화, 매점매석·가격선동 등 위법 행위 엄중 단속
공공 서비스 체계 완비	- 국가 기본 공공서비스 표준을 새롭게 발표 - 고품질의 생활 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 연구·발표 - 농촌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 인구 고령화 대응전략 추진, 양로사업 및 양로산업 발전 추진, 노인 건강 서비스 및 관리 강화, 실버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시스템 연구 - 적극적인 출산 지원조치 이행 촉진, 출산·양육·교육 비용 절감,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 촉진 - 양로·보육(一老一小) 서비스 체계 지속 완비, 양로 및 보육 서비스 공급 확대 -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대대적인 발전 추진, 문화 보호·전승·활용 공정 실시, 문화재 및 문화유산 보호 강화, 현대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 완비, 문화혜민(文化惠民) 공정을 혁신적으로 추진, 국가 문화공원 건설 - 문화와 관광의 융합 발전 촉진

44) 기층의료기관은 지역건강센터, 농촌 보건소, 진료소, 의무실 등을 의미함.

45) 인근지역으로 짐 없이 가볍게 떠나는 방식의 여행.

46) 실거주형 주택 상품.

47)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 주택 구매 수요자를 위한 상품.

48)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을 의미.

49) 전문적이고,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의미.

50) 상품 및 생산요소에 대해 지역간 제한 없이 자유로운 이동을 구현, 최적화와 효율화된 시장을 의미.

51) 처리해야 할 업무가 여러 부처에 연관되었으나 창구에서 일괄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 편의를 제공.

52) 비옥한 토지로 부패한 나무·풀 등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농업에 가장 적합한 토지로 평가받고 있음. 중국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2022년 '흑토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黑土地保护法)'을 제정하여 흑토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음.

53) 설계, 제조, 포장, 운송 등 생산 전 주기에서의 보다 효율화된 제조방식을 의미.